제346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0월24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 2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2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2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률안 등 의안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전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생방송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4시08분)

○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의 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동 기금의 사업이 대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입니다.

이정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이계문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62조 225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조 161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229조 5729억 원으로 금년보다 13조 548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 전망과 그간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2조 4496억 원으로 금년보다 12조 3869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조 9400억 원으로 금년보다 32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6조 5885억 원으로 금년보다 4조 937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459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및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역전략사업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하여 3조 5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사업비 2조 3471억 원, 복권기금지원사업비 1조 7312억 원 등 총 4조 8758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97조 1504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88조 9479억 원 등 총 187조 910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공여 8087억 원 등 1조 19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179억 원 및 금융기관 예치 2420억 원 등 3766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35조 373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53조 3957억 원 등 90조 421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취득사업 9058억 원, 비축토지 매입 400억 원 등 1조 228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상환기금채권 및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3조 9000억 원 이내의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2조 2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환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한층 편하게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 납세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231조 5000억 원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세청 세입예산은 가산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1조 693억 원이며 금년보다 60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에 따른 가산금 징수실적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1조 617억 원을 반영하였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토지·건물 매각대 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6100억 원으로 금년보다 6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조 1300억 원으로 호봉승급 등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529억 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1651억 원으로 세무서 신설 소요 등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133억 원으로 대부분 국세 부과·징수를 위한 운영비 성격의 경비이며 금년보다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속적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58억 원, 탈세 대응 강화를 위해 1458억 원, 체납·징수 관리를 위해 463억 원, 세정 지원을 위해 45억 원, 국세행정전산화사업 등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1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국세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세정 여건에서도 내년에도 국세청이 국가 재정수요 확보라는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임환수 국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홍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세청은 관세와 수입부가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 화물 통관 및 물류 흐름의 원활화와 FTA 및 AEO 활용 지원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 먹거리, 마약, 총기류 등 국민 안전 위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과 국외 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엄정한 대외경제질서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벌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의 세수여건과 징수실적 추이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5% 증가한 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강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장비 도입, 관세행정 정보화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금년보다 2.4% 증가한 5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실소요를 반영하여 각각 3039억 원과 3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완료 등으로 1% 감소한 1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사업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FTA 이행 지원, 최첨단 통관물류체계 운영 등 수출입통관 분야에 147억 원, 관세탈루심사 및 원산지 단속 역량 강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제도 확산 등 관세심사 분야에 35억 원, 밀수 및 불법·부정 무역의 단속,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감시장비 도입 등 밀수 감시단속 분야에 359억 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등 정보화 및 국제협력 분야에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4600여 관세청 직원들이 우리 청에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천홍욱 관세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호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을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재정이 규모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연간 약 55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에 대해 초기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

로도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조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조달청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정부기업 특별회계 기관으로 조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세입으로 하여 인건비, 주요 사업비 등의 세출을 충당한 후 잉여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년 조달특별회계 예산은 총계 기준으로 3389억 원, 순계 기준으로 2385억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각각 3% 및 4.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3.0% 감소한 3389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영업수입은 2.4%, 영업외수입은 3.4%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금이 21.1%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3.0% 감소한 3389억 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실소요를 반영하여 각각 660억 원과 1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국유재산조사용 드론 구입,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비축창고 확보사업 등 2016년도 종료사업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19.6% 감소한 3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비사업성 예산은 실소요와 세입 전망 등을 감안하여 2016년 대비 1.1% 감소한 2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 19.6% 감소한 396억 원으로 클라우드 활성화 사업 및 국유재산조사용 드론 구입 등 신성장산업 육성, 조달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5만여 공공기관과 32만여 조달업체를 응대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처우 개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종합심사낙찰제 등 신규제도 도입으로 중점추진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축창고 신축 등 16년도 종료사업과 조달정보화 등 일부 사업의 체질 개선으로 1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사업성 예산 내역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16년 대비 5.3% 증가한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세출 간 차액인 잉여금 1106억 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비축물자 확보를 위한 회전자금은 회전자금 운용계획의 수정으로 16년에 모두 확충되어 17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정양호 조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경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계청은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여 국민 응답부담은 줄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조사 효율성과 통계품질을 높이는 한편 공공자료의 개방 확대 등 통계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통계청 세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청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통계생산 대행 등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20억 원과 통계자료 판매수입 및 관유물 매각대 등 14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3306억 원보다 13.6% 감소한 28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1.7% 증가한 1340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2.0% 증가한 1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경제총조사 본조사의 완료로 2016년도 대비 26.1% 감소한 13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통계표준분류 및 품질진단제도의 운영, 통계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 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해 159억 원을, 통계지리정보 및 통계DB 서비스 등 빅데이터 통계생산기반 구축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인구·고용·복지 등 국가기본통계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8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5개 지방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의 운영경비로 70억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청사 환경 개선 등 통계행정 지원사업비로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절약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통계청이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통계생산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유경준 통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국세청·관세청 소관 예산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국세청·관세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국회의 사후 승인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 정책홍보나 조직신설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 목표가 계속 변동됨에 따라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준칙 등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총량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7년 TV, 라디오 등 광고 예산은 5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고 예산이 전년 대비 82.5%나 증가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AIIB 연차총회 개최 예산안이 개최지인 제주도와 구체적인 사전협의 없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제주도도 지방비를 투입할 예정이므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0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두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이월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월된 예산은 세입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62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차관사업의 집행 부진에 따른 여유자금이 1247억 44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다소 불충분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향후 차관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제주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제주도 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위주로 외

국 대학 연수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2017년 계획안은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보다는 중국어권으로 해외연수를 유도하는 것이 취업률 증가라는 사업 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영미권 기준으로 산정한 해외연수비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산안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도 징수위탁 규모 확대 사유를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위탁징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의 징수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징수위탁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관세청 예산안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이력관리품목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여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보고서 밑에 함께 배포되어 있는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보증동의안의 보증 대상인 3조 9000억 원의 채권 발행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우리은행 등 출자주식이 당초 계획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될 경우 채권 발행 규모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보증동의안의 보증 대상인 2조 2000억 원의 채권 발행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출금 조달을 위한 장학재단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대출금리가 높아 학자금 대출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경태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의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조달청·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조달청·통계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 총괄 편입니다.

2017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추경예산보다 3.9% 증가한 241조 76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성장률 상승, 법인의 영업실적 증가, 민간소비 증가 전망 등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4개 세목 모두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년도 실제 세수실적 전망치와 비교해 볼 때 2017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의 증가율 및 세수탄성치가 낮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과소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수준으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세수탄성치는 0.95로서 최근 2015년 및 2016년 추경예산의 세수탄성치에 비할 때 다소 보수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정비노력 미흡에 관한 지적입니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3249억 원으로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세법개정안 심사 시에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 일몰이 도

래한 25개 조세지출 항목 중에 종료된 것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배당소득 과세특례 등 4개이며 이들 종료된 항목의 조세지출금액은 총 5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 세제 지원효과 저조 문제입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재산형성 세제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ISA)의 가입자 수, 납입액, 수익률 실적이 도입 당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되었던 수치보다 크게 미흡하여 지원효과가 저조하므로 2017년 세입예산안에서 ISA 세수효과를 189억 원 정도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1111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반영 필요성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섯 가지 세액공제의 세수효과는 19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므로 이를 국세 세입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서 17년도 예산안 편성에 해당 세수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재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조달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해외조달 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 개선 문제입니다.

조달청은 G-PASS기업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업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지원사업별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수혜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위한 지원기업을 신청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만 4개 기업이 중도에 지원을 포기함으로써 약 1600만 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은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업체 선정 시에 페널티를 주는 등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절실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06페이지입니다.

설계적정성 검토 수입 관련 지적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협의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가 신속하게 고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세입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협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편성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계적정성 검토 수입 예산은 2016년도 예산에 최초로 편성되는 세입 내역이지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6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수료가 고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적정성 검토 수입의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 9800만 원, 76% 감소한 16억 92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달청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통계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 및 통계상품 위탁판매수수료 예산액 감액조정 필요성입니다.

2015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료의 무료 전환으로 통계상품 판매수입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타잡수입을 1억 68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투입인력 조정 등을 통해서 통계상품 위탁판매 수수료 예산도 함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 예산 신규 편성 부적정 문제입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은 통계전문교육지원 세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4급을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과장급 역량평가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 1억 14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표준화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필요성입니다.

지역통계표준화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지역통계 개발·보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되어 있는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범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경태 조의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조경태 아직,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자료 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2017년 예산안 제출했는데요, 이게 이 세입안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몇 년 동안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결손이 몇 년 동안 나다가 또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으니까 또 18조나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에 대한 근거가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20일 날 아마 야당 보좌진 예비검토에서 21일까지 세입안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 세입안을 한번 꼼꼼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이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해서 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그러면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을 어떻게 구조조정했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게 얼마나 세출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지금 이게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자료 좀 꼭 부탁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태 예,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유일호 부총리님 그리고 기관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정부 각 부처 기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할 텐데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책무를 저희들이 다하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수감기관의 자료 제출 미비 또 일부 증인의 증언 거부로 빚어진 일이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지정기부금 지정과 관련된 명확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일부 증인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경쟁적 시장구조로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었는데 그 정책의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추가 특허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책의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추가 심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혹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어서 이 부분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 각 위원들이 요구한 서류들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언·감정법 12조에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합당한 이유 없이—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또 증언 거부에 대해서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번 매듭을 짓기 위한 논의를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개헌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을 밝혀 주시고, 편성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조경태 유승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위원 저는 다른 것은 다 안 하더라도 한 가지는 계속 좀, 우리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부로부터 정부의 계획을 보고받기를 희망했는데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정부로부터 보고를 듣지 않고 기획재정위원회가 토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기획재정부로부터도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언제까지 보고를 하며, 우리 위원회는 그걸 가지고 언제 토론을 할 것인지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여야 3당 간사님께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언제쯤 정부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위원장 조경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여야 3당 간사님, 조금 그 부분 논의를 해 주십시오.

김성식 간사님.

○김성식 위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세 사람의 간사가 의논을 해서 언제쯤 자료를 받을 건지 좀 의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미 국정감사와 그 전에 구조조정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의 답변이 9월 말까지는 조선 구조조정, 특히 대우조선해양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과 해운업 전체 산업경쟁력을 포함해서 제출하겠다고 한 바가 있고, 10월 중에는 어떻게든 또 늦지 않게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장관의 보고로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은 매우 적절하고도 정당하게도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예결산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 점이 나중에 우리가 소관하는 수출입은행 또 주요한 산업은행 등 여러 가지 출자 혹은 여태까지 출연, 자금 운용,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명료한 판단 자료를 배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줬어야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일이라기보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조금 참고하셔서 명료하게 오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오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묻고, 언제까지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제출할 것인지를 확답받는 것이 더욱더 실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업무보고 이래 지금까지 계속된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의 구조조정의 책임 있는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경태 이현재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새누리당 간사 이현재 위원입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당초에 정부에서 10월까지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 되는지, 그러면 차후에 날짜를 잡아서 보고하는 일정, 그것을 부총리께 위원장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조정 문제가 예산하고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가 주니까 우선 예산심의에 중점을 둬 가면서 지금 준비 안 된 자료를 채근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조경태 의사진행이 너무 많아지셔 가지고 본질의하실 때, 주질의하실 때……

○이언주 위원 아까부터 계속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조경태 주질의하실 때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를……

○이언주 위원 지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경태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좀 있어 보세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조경태 한국말은 끝까지 좀 들어 보세요.

○이언주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조경태 주질의 때 가능하면 의사진행의 성격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님을 끝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고 주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막 제한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별로 못 봤는데요. 별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의사진행발언까지 이렇게 자꾸 제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수추계 산출 내역 자료를 달라고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수추계 산출 내역 자료를 안 주면서 지금 예산안 상정을 하고, 무슨 관련 부수법안으로 또 세법을 심사하고, 그런 게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수추계 산출 내역 자료를 오늘 중으로…… 이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중으로 다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무슨 들러리로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요.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과 또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국감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계속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게 뭐였는데요? 오늘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구조조정 관련된 정부안을 갖다가 몇 번을 연기하고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마련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또 지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위원장님께서 유일호 부총리께 이번 주 안에 낼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국회에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언제 할 건지 그것부터 정하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장관님께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언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부총리한테 답을 들어 달라고 지금……

○김성식 위원 여당 간사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김태년 위원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 요청한 의사진행발언인데 무시하시고 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조경태 위원장 이야기할 때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질의를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속 거듭 촉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언주 위원 촉구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요청을 하셔야지요.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김태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것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부총리한테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 제출 요구되어 있는 자료, 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세수추계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으니 위원장님께 그 답을 받아 달라 이 주문이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요구한, 요청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님께서 부총리한테 질의를 해서 그 답을 받아 주셔야지요.

○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장님께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니까 잘 들립니다.

부총리님, 세수추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장 조경태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세목별 세수추계 방법 또 주요 변수 이런 것들은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 가능한 것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그리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하시기로 했으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달 말, 10월 31일까지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손을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그래서 저희 위원회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열겠습니다. 열어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구조조정안을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마무리를 꼭 빨리 짓고 하여튼 이달 말까지는 꼭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남·울릉·독도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기재부장관님하고 여러 기관장님들, 국정감사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개헌을 정부가 주도하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개헌 추진과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없습니다. 없고, 아직 요청받은 바도 없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그런 필요성 같은 것 가지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단은 전혀 없을 때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박명재 위원 물론, 벌써 예정된 사항이니까, 이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다면 아마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금년 내에 정부의 추진단이 발족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비비를 쓰게 됩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부처의 예산 항목이 있나요?

없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비비는 물론 활용할 수 있고요. 각 부처가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얼마나 될지는 좀 저희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박명재 위원 개헌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우리 국고금 출납하다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일시차입의 방법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하는 것, 내년도 규모가 얼마로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2017년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내년도 일시차입은……

○박명재 위원 지금 보니까 18조 8000억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18조 8000억 원.

○박명재 위원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금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보니까 거의 88조 5000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로서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입 여건이 양호하고 그래서 내년도 세입 여건도 조금 양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출 스케줄도 관리한다든가 하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해마다 보니까 한 20~30조 정도 어간 그리고 2015년도에 88조, 좀 많이 썼습니다마는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또 그 조달 방법도

보게 되니까 재정증권 발행 비중을 76%, 한국은행 일시차입 비중을 24%, 제가 늘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재정증권 발행하려면 공고 내야 되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3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손쉽게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빌려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아주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재정증권 발행 비중을 76%,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24%, 그런데 2012년도 보게 되니까 실지로 보게 되면 한국은행 차입 비중이 57.6%, 거의 60% 가까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24%만 하겠다, 굉장히 바람직한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이 좀 양호하게 예상이 되고요. 또 세출 스케줄 관리를 좀 잘하면 세입 세출 차입시기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박명재 위원 아주 건전하게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한은 일시차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자금 소요가 해소되면 즉각 상환하도록, 제가 이것을 갖다가 국고관리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외평채 신규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박명재 위원 10억 달러지요, 2017년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굉장히 많이 했던데요. 보게 되니까 2016년도에 6억 달러에서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도 만기 도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편성되는데, 내년도에는 만기 도래 채권이 전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조금 선제적으로 발행을 하는데 이게 아마 올 12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요, 이런 대외 여건의……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소위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금년 8월 말 외환보유액이 모두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금년 8월 말이……

○박명재 위원 3754억 6000만 달러,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상수지나 흑자기조로 앞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데 10억 달러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이 조금 의외로 느껴지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게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차손익, 즉 이익의 차익·손익이 발생하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됩니다.

○박명재 위원 2015년도, 작년에 이차손익이 얼마 발생했느냐 하면, 알고 계십니까? 무려 7조 7000억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외평채 신규 발행이 기금의 이차손익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구조적으로 이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대신에 운영수익을 제고하면 그 이차손을 줄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채무관리계획 보게 되면 외평채 외에도 2020년까지 매년 12조 원의 국고채를 신규 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명재 위원 여기에 따른 재정부담 이것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건전 재정기조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예산 짤 때 경제성장률 몇 %로 전망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경상성장률 전망 2015년 6.1%고요, 2016년……

○심재철 위원 내년 거요, 내년 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 내년……

○심재철 위원 3%로 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경상성장률로 하니까 4.1%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경상 빼고 실질로 보면 3%로 짰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실질로는 3%,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2.8%에서 2.7%로 낮추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해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결과적으로 보면 낙관적으로 본 모양이 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 그래서 5년 동안, 2011년에서 15년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른 민간 기관들, 주요 전망 기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측 오차, 예측 바이어스가 제일 커요, 기재부 것이. 이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이 5년간 정부 전망치 연평균 예측 오차가 5년 치를 평균해 보니까 1.08%p가 나와요, 지금. 그리고 국내 전망 기관 중에서 다들 1%p 미만 차이로 전망을 하는데 기재부만 이렇게 1%p가 넘게 전망 오차가 나는데 이것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망 오차가 5년 치 평균으로 제일 적은 게 한국경제연구원이 0.64%p가 나옵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세수가 결정되고 모든 재정정책과 살림이 결정 나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는 민간에서 과연 신뢰할 것이냐, 정부의 전망을.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기 재정수지 전망 추이도 마찬가지로 상향 바이어스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길게 보면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빠지지 않게 좀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최근 5년을 말씀하셨지만 최근은 그 전망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 전망은 계속 수정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전망을 좀 더 정확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심재철 위원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냐하면 좀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해서 우선은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나중에 남는 것 있더라도. 이런 심리가 지금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주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KDI가 대형 사업에서 예타를 하는데 예타 통과한 도로사업 275건 중에서 현재까지 20개가 완료됐는데 완료된 것을 예타 때 예측 교통량하고 실제 이용 교통량하고 따져 보니까 평균 51%의 오차가 발생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도로사업이 20개가 끝났는데 그 중에서 12개는 과다 예측되고 8개는 과소 예측되고, 철도사업은 15개 역 중에서 11개가 과다 예측되고 4개가 과소 예측되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감사원에서도 2013년에 KDI에 대해서 '예측 좀 올바르게 잘 하십시오. 주변환경 잘 따져서 수요 분석 잘 하십시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재부가 검토 중인 인덕원-수원 전철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반영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호계사거리역 신설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에 확정했는데 KDI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호계사거리역 인근 내 4건에 달하는 대형 재건축사업들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통해서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됐고 안양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3900세대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KDI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구체적인 편익분석 자료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업 증액분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부총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KDI와 관련 국토부가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더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처음으로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서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했는데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만족도에 대한 조사 비중치가 너무 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보다도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개발툴을 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만족하십니까?', 자기가 손해 보는 것 아니면 전부 만족한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각각 나오던데, 어떤 만족도는 60점 만점으로 하고 있고 어떤 만족도는 70점 만점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도 60점 만점인 데는 60점을 받고 어떤 데서는 70점을 받고, 기준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성과치 분석을 위해서 개발툴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각 부처 사업에 대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방식을 훨씬 더 개선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더욱더 알뜰히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추경에서 외평채 관련해서 3000억 편성을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때……

○박주현 위원 그런데 아까 박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외환보유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주현 위원 또 지금 국가신인도가 나름 높아서 국내 기업들이 외평채 발행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리고 그동안 상환 목적으로 해왔었고 외평채를 신규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최초인 것은 아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금융위기 이후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 2008년 위기 이후에요?

○박주현 위원 예, 정부가 지난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외평기금이 남는다고 해서 200억 달러, 24조 규모의 외화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거의 소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지난번 질의 때는 50억 달러는 아직 대출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드린 말씀이 거의 소진이 되어 가고 있다……

○박주현 위원 해외 M&A 관련된 50억 달러, 6조 정도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주현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신

규 발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거로는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소명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외평기금을 통한 50억 달러의 해외 M&A 외화대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아까 여러 가지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로서 이것을 발행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지로 지금이 말씀하신 대로 신용등급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조달 비용이 오히려 절감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M&A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말 그것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도를 둘 것인가, 존속 여부를 점검의……

○박주현 위원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제도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017년 말까지.

○박주현 위원 제가 지난번 지니계수 관련해서 예산에서 양극화 해소 목표가 최대 목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니계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고소득층이 빠진 가계동향조사는 원천적으로 소득 불균형 지표로서는 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되는 신지니계수를 다음 달에 있을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지니계수로 발표하시기를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금복조사에 행정자료를 계속 보완하는 문제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1인 가구 금융소득 자료를 지금 제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감 이후에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보냈었지요? 그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유권해석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유권해석 결과 1인 가구 금융소득을……

○국세청장 임환수 1인 가구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고……

○박주현 위원 총액은 괜찮다?

그리고 이미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체계 관련해서 1인 가구 금융소득 자료를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2013년 정도에.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시행을 하시고 통계청장님은 국세청,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뿐만 아니고 향후에 지자체나 또 신용 관련 기관들로부터도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예,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리고 국세청장님,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특별세무조사 들어가셨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특정 납세자의 세무조사 여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은 납세자가 그 누구든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할 겁니다. 하고……

○박주현 위원 지난번 기재위 때 제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분식회계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별세무조사를 시행하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어쨌든 언론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당시에 조세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실시하겠다라고 하셨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조가……

분식회계 과정에서 조세 탈루 혐의가 발견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탈루 혐의가 있어야 세무조사 선정이 되는 것이니까……

○박주현 위원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조사가 종결되면……

○박주현 위원 지금 예측 못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조 처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탈세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당연히 국세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할 겁니다.

○박주현 위원 부총리님, 지금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년 초에 배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 관련된 예산을 예비비로 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비비 승인해 주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올해는…… 작년이 예비비였던 것으로……

○박주현 위원 작년 예비비 승인해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일단 내년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다라고 지금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내년에 배포하고 이런 작업에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돈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예비비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이 예비비의 요건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현 위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고, 예비비로서의 요건을 철저하게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당연히 예비비는 요건에 맞아야 편성이……

○박주현 위원 요건에 맞아야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실내가 좀 더워서 윗도리를 벗고 질의드림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계상할 때 김영란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내년도 편성할……

○김성식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부총리님 또 각 청의 청장님들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보시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감액될 소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 예결소위가 진행되기 전날까지 저에게도 내주시고 모든 위원님들 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이번 예결소위에서 많은 시빗거리도 되고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돈해서 내 주시고, 미리미리 정돈을 안 할 경우 불용이 생겨서 나중에 연말에 임의로 쓰다가 또 복잡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학자금 대출금리가 이제까지 2.7%로 매우 높아서 예산 심사할 때마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부대의견을 계속 달아 왔고 이번에 2.7이었던 것을 2.5정도로만 낮춰 왔습니다.

지금 국가보증이 붙어 있는 채권 아닙니까? 이 금리를 좀 더 낮추어서 학자금 대출받는 학생들의 부담을 정말 덜어 주자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많이 조정되지 않은 가운데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좀 되리라고……

○김성식 위원 지금 모 장관후보자의 경우 1%대 금리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랄까요, 국가 동의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말이지요, 채권 발행에 있어서. 이런 것을 본 많은 대학생들이 왜 우리는 더 비싼 금리를 써야 하나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보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검토하실 때 정부로 하여금 확고하게 금리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받는 학생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확고한 대책이 부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시차입금의 이자 상환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70억 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성식 위원 올해는 생각보다 세수가 다 걷혀서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관련 돈을 거의 쓰지 않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성식 위원 올해는 거의 안 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뭔가 단기적으로 수치를 높여 보겠다, 이런 방식은 이제 그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 못 해서 집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반기에 정부 지출 부분이 GDP의 마이너스 재정절벽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 중의 60%를 조기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 살리겠다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금은 혹시 대비해서 아주 소수의 금액만 남겨 놓고 전액 삭감해야 옳다고 저는 봅니다.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재정 운용에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요컨대 부총리님, 저는 기획재정부가 정말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뭘 할 것인가 또 그와 관련된 예산 사업들에 몰두할 일이지 조기 집행해서 조금 수치 마사지하고 이것 이제 그만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470억 원이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10%씩 깎으라 그래 가지고 복지 쪽의 어려운 계층 10%씩 잘려 나간 예산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되고, 소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누리과정 예산이고요, 하나는 노인일자리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공약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단가를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약입니다.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단가 20만 원, 2002년에 정해졌나요? 2002년에 정해진 단가 맞나요? 이것이 지금 십몇 년이 넘도록 왜 노인일자리수당만은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는지 또 빈곤노인층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소득 배가를 고려하지 않는지 저는 매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부총리께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이제 십몇 년 동안 동결되어 온 노인일자리 예산 월 20만 원을 30만 원 정도로라도 올리는 그런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올리는, 물론 다 추가 재정 소요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대기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자리 수 확대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지난번 추경 때 또 우리가 제 기억에 1만 한 2000개 정도 늘려서 추경도 편성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단가 올릴 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국회 중계로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요, 십몇 년 동안 오로지 노인일자리 예산만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계속 동결하는,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누리과정도요, 지금 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원입법이 통과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처리한 것은, 가뜩이나 교부금 예산도 칸막이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원칙적으로 교부세 교부율 변동에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금 안에 또 칸막이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4조 이상 드는 누리과정 예산 중에 유치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더라도 보육예산 약 1.9조 정도, 약 2조 정도는 이제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전체 예산심의 과정 속에 기획재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우리 학자금대출제도가 전액 채권 발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그런데 다른 나라의 학자금제도 운영을 보면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지금 대출이자를 낮출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도 채권을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조달금리가……

○위원장 조경태 예,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된 법도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냈거든요. 정부가 일정한 출연금을 통해서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좀 경감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정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지금 프랑스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학자금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0원입니다, 없습니다. 잘 참조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낮출 수가 없다면 점차적으로 대출이자를 좀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 부총리님, 오늘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 다루면서도 지난 우리 정부 추경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돈이 내려갔겠지만 기초지자체까지, 각 기관까지 이렇게 실제 집행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바쁘시지만 꼭 좀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우리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약 13조 50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소 보수적 편성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예측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세입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수적, 그러니까 예측에서 벗어날 정도의 보수적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용수 위원 물론 이런 세수, 내년 예산은 국세청하고도 의논, 교환이 많이 된 것이지요?

청장님, 이 세수안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기본 자료는 기재부에 제출합니다만 세수추계는 전적으로 기재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백데이터는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기재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항상 제공해 줬습니다.

○엄용수 위원 일반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세수는 충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내년도요?

○엄용수 위원 예, 내년도요.

○국세청장 임환수 현재 여건이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엄용수 위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또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정부에서 세수추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명확히 제시해서 그런 논란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일부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법인세율을 올리는데 왜 투자가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세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투자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율을 내렸을 경우에 그게 투자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세후수익률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할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그런 어떤 부담을 다소 지더라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침체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부담을 다소 각오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경기 방어를 하는 데 가장 최우선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우리 부총리님 답변이, 어디를 가든 간에 확실하게 확고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국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건의를 좀 드리면 저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이 예타가 '수도권을 위한 그런 제도다. 영원히 수도권과 지방은 이렇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이렇게 많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실시해서 제대로 B/C계수 나오는 데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타의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예타는 단순히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우선순위로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되지 모든 곳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예타를 적용한다면 지방과 수도권은 점차 더 격차를 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기존 예타 시행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더 마련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있는데 그것의 비중을 조금씩조금씩 높여 왔는데 위원님이 지금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올리는 그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여러 가지 세입 전망을 할 때 전제로 했던 것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률,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성장률을 3.0% 정도를 보는데 이것보다는 더 낮을 것이다. 또 금년 1~8월 중에 20조 정도를 더 걷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일까,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인 것인가 이러한 문제 또 부동산시장이 그동안에 호조를 보여 가지고 자산시장을 통한 세수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지금 이것도 호조세가 약화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 기업 경영도 그동안에 법인세가 더 들어왔던 것이…… 금리가 낮고 저유가였기 때문에 그나마 법인소득을 좀 버텼는데 이것도 지금 낮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법인소득이 좀 감소할 것 같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적에 세수가, 어떻게 보세요? 세수가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지금 봐지는데……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성장률 말씀은, 제가 그것 외에는 지금 세목별로 사실 세수추계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세수에. 예를 들면 자산시장의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든가 증권거래세 이런 것은 일시적이라고 봐서 그것은 좀 반영을 했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경상성장률이 달성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민간의 경상소비 증가는 그래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지금 해운·조선·건설·철강 이렇게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법인소득이 상당히 떨어질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쪽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종구 위원 경제가 이렇게 불황인데 세금이 장기적으로 잘 걷힐 것…… 물론 금년의 1~8월 중은 조금 예외적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잘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종구 위원 국세청장께서는 감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마는 세제실하고 세수 전망 얘기할 적에 서로 간에 의견을 많이 조율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어떤 감을 가지고 계세요?

○국세청장 임환수 저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임금도 증가하고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또 최고세율 구간이 1억 5000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나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서 제가 늘 주장을 하지만 법인소득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세원이 줄어드는데 법인세를 올리면 뭐하냐, 그 효과가 크게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법인세를 올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예정처나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들의 얘기는 지출 분야에서 복지지출, 복지지출이라는 게 성장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지출의 성장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약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지출을 좀 더 잘 관리해야 된다, 말이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지 좀 줄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복지지출이 예를 들면 SOC 같은 것하고는 조금, 성장기여도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소비로 환원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기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체 복지지출 수준이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낮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증가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복지지출 상당 부분이 의무 지출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이종구 위원 제가 줄이라는 것은 증가세를 좀 둔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특히 미래지향적인 복지지출, 소위 유아나 젊은 사람들을 위한 지출은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노인분들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장관께서도 많이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통계청장께, 지금 우리가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또 이민자도 많아지고 하여튼 일단 부족한 노동력이 국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귀화자도 많아지고?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 부분, 이민자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올해 9월에 실무조사를 완료했고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17년 조사 예산을 법무부에서 받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요새는 조선족들 이런 분들도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또 심지어는 중국의 여러 가지 폭력조직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에 대한 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 적어도 이런 것을 갖다가 확립을 해야 된다고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예산이 반영 안 됐지만 노력해 가지고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민 위원 다른 것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신 10월 말의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게, 그게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것을 발표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로서는 방침이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유승민 위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승민 위원 지금 보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제가 직접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보고는 되겠고요.

그와 관련된 것을 또 전반적인 것을 진행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면 해운은 지금 진행 상황이 되고 그래서 곧 대통령께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국회가 10월 말 되면 바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승민 위원 국감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는데요, 국감 때 제가 최소한 두 번 이상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총리께서 최근에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직접 말씀입니까?

그 사이에는 시간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유승민 위원 잡으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위원 청와대에다 이야기했는데 보고를 안 받아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정이 잘……

그리고 제가 국회에 나오는 날짜, 내일은 국제행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유승민 위원 부총리도 되게 바쁘시네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내일은 아프리카 장관들하고 행사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예결위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유승민 위원 지금 보니까 그저께, 그저께 아니네요. 벌써 닷새 전이네요. 19일 날 경제장관회의라는 것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례 장관……

○유승민 위원 거기에 장관 16명, 청와대 경제수석 이래 가지고 17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장관이 3명 참석했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랬을 것입니다.

○유승민 위원 그런 장관회의는 뭐하려고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날, 대개 그 부처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차관 대참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승민 위원 그런데 경제장관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바꿨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을 포맷을 좀……

○유승민 위원 그리고 그날 부총리께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조금 그런 심각한……

○유승민 위원 그런데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제가 불참 사유를 어제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무슨 보고받느라고 안 오고 출장갔다고 안 오고 시상식 간다고 안 오고……

이 장관님들이 지금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부총리께서 대통령한테 그만큼 보고 좀 하셔 가지고…… 대통령께서 맨날 북핵만 말씀하시고 오늘도 개헌만 말씀하시고 저러지 말고 지금 경제위기에 대해서 올인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게 저의 요청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요청인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국감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대통령한테 보고도 못 하고 시간도 못 잡고,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한다는데 장관 16명 중에 3명밖에 안 오고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은 오지도 않고……

뭐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래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형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유승민 위원 그래서요, 저는 부총리께서 이왕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으면, 그러면 저는 지금은 좀 비상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그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최종 확정을 하면 더 이상 안 바뀌는 계획을 가지고 온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단 저

희는 그렇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위원 아니요, 구조조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무슨 국민의 돈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하지만 구조조정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위원 산은하고 수은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100% 정부 책임과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맞습니다.

○유승민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유승민 위원 우리는 동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우리 국회의 권한에 있는 법과 예산으로 통제를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안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요.

부총리께서 제 말씀에 대해서, 저 혼자만의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좀 이렇게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을 밝히시고, 저는 그런 식의 경제장관회의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들 대참해 가지고 그냥 가만 앉아 가지고 듣고만 가는 그런 경제장관회의를 왜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날은 정말 그렇게 된 것이 저희로서도 참……

○유승민 위원 아니, 그 상황을 알았으면 차라리 연기해 가지고 밤늦게 만나든지 주말에 만나든지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날 마침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장관회의의 형식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례 경제장관회의는 하되 일주일에, 중간이라 해야 될까 그것은 정말 이슈를 먼저 정하고 그것에 관련되는 장관들끼리만 만나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도 경제장관회의를 하면 생각보다는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 어쨌든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요.

또 기존의 경제장관회의도 장관들의 출석이 제대로 되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이제까지는 어떠했든 간에 지금부터는 정말 경제사령탑으로서 사령탑의 위치에 부총리께서 정위치를 해서 회의도 참석 안 하는 장관 그런 사람은 경질을 건의를 하십시오,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빠른 시간 안에 독대를 하셔서 '지금 이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래서 지금 남은 임기 동안 이러이런 데 위기 방지, 위기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러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그런 위기의식이 없었고, 장관께서 그동안 해 오신 것도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대통령께서도 오늘 시정연설에 잠깐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 핑계를 대서 그렇습니다마는 내주 화요일까지는 제가 예결위를 계속 닷새 연속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날짜가 거의 그렇게 잡히리라고 보는데,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례적으로 그야말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 나머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세청장님, 국감 끝나고 기사 보니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서,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탈세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국세청장 임환수 검찰에서 수사를……

○김현미 위원 검찰에서 하는 겁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김현미 위원 국세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국세청장 임환수 우리도 당연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지난 국감 때 우병우 수석의 처가에서 SDNJ라는 도관회사 만들어 놓고 배당소득를 탈세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나요?

○국세청장 임환수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국세청장 임환수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회사는 명백하게 사무실도 직원도 사업도 없이 오로지 배당소득 탈세밖에 하는 일이 없는 회사니까 조사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좀 말끔히 털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고 가는 정부가 참 안타깝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현미 위원 내년에 경제성장률 3.0……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실질성장률……

○김현미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로서는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 위원 올해 성장률 3.3% 예측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원래 그렇게 예상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현재 얼마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2.8%로 저희가 하반기에……

○김현미 위원 그러면 0.5%의 차이가 있네요,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작년 12월에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현재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한은은 2.8, NABO는 2.7, KDI 2.7 그러네요. 약 0.3% 정도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세수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어느 것 영향 말씀……

○김현미 위원 내년 세수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만약에 성장률이 떨어지면 말씀입니까?

○김현미 위원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요, 저희는 일단 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마도……

○김현미 위원 경상성장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부가세가 될 텐데요. 또 각 세목별로는 조금 더 다르게 보실 수도 있고 해서……

○김현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세제개편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던 건데, 내년에 세수효과가 2461억이 느는 걸로 지금 가져오셨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순증……

○김현미 위원 그런데 기재부가 저희 준 것만 보면 2018년에는 5196억 원이 주는 걸로 또 돼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중기계획상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세법 개정을 해 가지고 2461억 원밖에 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률이 3.0, 경상성장률은 4.1을 달성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내년도 세수가 늘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굉장히 위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어떤 세금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를 기재부에서 받아 봤어요. 기재부에서 받아 본 것에 따르니까 소득세는 오히려 677억 원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게 되고, 법인세도 7억이 줄게 돼 있고요. 부가세도 207억 원이 줄게 돼 있고요. 관세도 78억 원이 줄고 기타 135억 원이 줄어서 유일하게 느는 것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해서 3643억 원이 느는 것 그것 하나로 2539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 경제가 재정상태가 얼마나 나

쁜데 이렇게 세수를 다 줄이는 것으로 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인상하는 건데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 전기요금 자체를 바꿔……

○김현미 위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 전기요금에 전혀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마 영향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김현미 위원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부가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매년 재정수지가 나빠지고 국채를 40조 정도 쭉 발행을 했었잖아요, 30조 넘게. 그러다 내년까지, 2017년까지 30조 넘게 국채를 발행하게 돼서 관리재정수지가 30조를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어거지로 이것을 굉장히 줄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총액도 저희가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부가 떠나면서 임기 말 관리재정수지를 굉장히 나쁘게 했다, 국가부채를 700조 가까이 만들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말로는 굉장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에서 보게 되면 확장한 게 없어요. 물가인상률보다도 안 되고, 재정의 확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세제개편안을 이렇게 국가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다 세수가 줄고 개별소비세 인상하는 것 하나 달랑 가지고 와 가지고 너무 무책임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요, 위원님 전혀 무책임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목별로 또 세수 추이를 보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무책임하게 그냥 이만큼 나올 텐데 저렇게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또 제약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미 위원 그것은 제약이 아니고 굉장히 듣기 싫으시겠지만 저는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목별로 보게 되면 소득세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를 재설계하는 데에서만 이게 사실상 증액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소득세도 줄고 법인세에 있어서도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에서만 증액이 되고 이것도 줄게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가세도 줄게 되고, 주요 세목에 있어서 세수를 다 줄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하는 것 빼고 나면 다 주는 거예요. 그것 하나로 내년에 세수 2500억 늘려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아까 경제성장률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안 나오는 거지요.

국가재정이 이렇게 나쁜데 이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오는 것은 적자를 늘리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치에서만 안 느는 것처럼 보이게 위장해서 짜 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날 때 끝나더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세법하고 세입 심의할 때 충분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쭈어 봤던 개헌 관련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경제에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면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일단 개헌 제안이 어려움을 줄 것으로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6개월 전에 왜 '블랙홀이 되어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될 때 개헌 논의 한가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그것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회복이 돼서 개헌 논의를 해도 걱정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이제 신경 써도 어쩔 수 없으니 경제 놔두고 개헌 논의하자. 어떤 쪽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지금 경제는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만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길게 봐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아까 시정연설에 나와 있지만 개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가 해결이 된다든가 또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부총리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개헌 논의를 불쑥 내놓으신 것은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에 의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되고 또 그래야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정부와 청와대가 지금 개헌을 말씀하시고 개헌 관련 기구를 만들겠다고까지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전부 이제 나서서 개헌 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개헌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경제를 말씀하셨던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고,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총리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회복과 민생에 전념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정부는 임기 말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맡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수장으로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어차피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국민투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식도 분명하시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저희도 잘 진언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좋을 거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 국민들은 벌써 반응들이 지금 이 권력형 비리, 무슨 게이트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갖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저는 정말로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경제관료들의 힘을 쫙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하여튼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경제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 개헌 논의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 없이 개헌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타당한 면이 있고요,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그러나 오늘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이걸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오히려 혹 덩어리를 크게 붙였다, 근심 덩어리를 붙였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되면 '경제와 민생에 전념합시다, 정부는.' 이렇게 지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지표를 몇 가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코스피 세전 순이익이 작년에 63조인데 18.7%가 증가한 것이고요. 코스닥 상장기업은 세전 순이익이 5조에서 −8.3%, 그 밖에 법인세를 보니까 법인세 부담세액 중에 상위 법인 10%가 전체의

95.7%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 간에도, 법인 간에도 양극화가 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거지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근로소득 75.4%, 이자소득 91, 배당소득 94, 종합부동산세 88, 양도소득 83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매우 무겁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또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는 매우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동수당세를 제안했는데요. 제가 제안한 그 방식으로 하면 연간 9조 원 정도 세수가 증대될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국세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금포인트제도라고 아시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우리 국세청 자체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아마 10만 원당 1점씩 그렇게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이 세금포인트 관련해서 2016년 예산과 2017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뒤에 혹시 알고 계시면……

○국세청장 임환수 예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예산편성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이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없나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최교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항목에 해당되나요? 이게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 납세 지원? 뒤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구태여 넣자면 성실 납세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의 하나입니다.

○최교일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납세포인트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1억 포인트, 그다음에 2012년에는 24억 포인트, 그다음에 28억 포인트, 32억 포인트, 작년에는 36억 포인트인데 금년에는 벌써 40억 포인트가 됐습니다. 40억 포인트가 됐는데 이 사용 내역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해마다 오히려 계속 줄어들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포인트 사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국세청장 임환수 대부분 한 80……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납부 세금 10만 원당 1점씩을 주니까, 한 80% 이상이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특별히 이용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고, 영세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할 때 담보가 면제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미사용 포인트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100포인트 이상 돼야 사용이 가능한데 100포인트 미만이 한 82%……

○국세청장 임환수 이제 월급쟁이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한 18%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2011년에 5260건에서 2015년에 2200건으로 거의 반 이상……

저도 사실은 이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금년에 세금을 납부할 때.

그런데 이렇게 활용도가 낮다면 예를 들면 가족 간에 포인트를 서로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 등……

○국세청장 임환수 예, 고민은 많이 합니다. 특히 영세·중소 상공인의 경우에 법인을 경영하지만 개인의 세금포인트를 법인이 어려울 때 쓸 수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은 많이 하고 있

습니다, 지금.

○최교일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세금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5년에 걸쳐서 한 40% 정도, 반도 안 되게 사용된다면 뭔가 개선 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 개선 방안을 많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권제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차관님한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2차관입니다.

○최교일 위원 복권제도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복권제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교일 위원 예, 복권제도 자체의 목적이라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복권 자체는 사행성 산업 중의 하나로 지금 돼 있지만 사행성이 가장 낮은,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서로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당첨되는 사람은 당첨되는 대로, 당첨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사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복권, 로또 이런 것이 사실 가난한 사람 호주머니에서 결국 돈이 나오는, 가난한 사람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 내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복권의 배당률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복권 배당률은 처음…… 지금은 제일 큰 복권이 로또 복권이니까 로또 복권으로 통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의 수입하고 지출을 맞춰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금 자체가 정해져 있고 당첨금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걸 더 추가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첨자 숫자라든지 이런 걸 또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한 뒤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복권제도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쓸 기금을 만드는 것이냐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돈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많이 돌아가게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리고 부총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대 총장님 몇 분께서…… 서울대 총장님, 충북대 총장님, 경북대 총장님, 부산대 총장님, 전남대 총장님, 강원대 총장님 이런 총장님들이 우리나라 R&D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초과학에 대한 R&D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가 못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문건을 아마 의원실로 많이 돌린 것 같아요. 저희 의원실에도 왔는데, 정말 우리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못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R&D 예산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R&D 예산이, 정부 예산이 기초과학 위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시고요. 저희가 R&D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러니까 기초의 비중이 좀 늘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인데 아마도 그것이 지금 왜 빨리 안 되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초연구 쪽에 좀 더 중심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빨리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예산에서 정부내부수입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정부내부수입 부분이 많이 준 이유는 뭐지요, 세입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것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내부수입……

○최교일 위원 여기 기재부 업무보고 6페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제게

말미를 좀 주시면 제가 좀 살펴보고……

○최교일 위원 이것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위원 부총리님, 올해 예비비로 얼마나 편성이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준영 위원 올해 예비비가 한 3조 5000억 가까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그렇게……

○박준영 위원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일반예비비가 보통 2조 2000이고요. 재해대책예비비가 1조 3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그 가운데 얼마나 사용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2016 실제로 지출…… 예비비 집행률은 현재까지 전체 집행은 한 36%고요. 재해대책비는 집행률이 이게 아주 낮습니다, 0.9%……

○박준영 위원 거의 집행이 안 됐지요?

(이현재 간사,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0.9%니까 그런 셈입니다.

○박준영 위원 올해 회계가 두 달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부지역을 몇 군데 가 봤는데요. 제 지역구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는데, 지난번에 태풍이 또 한 번 쓸고 갔지요? 그 후로……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차바……

○박준영 위원 태풍이 쓸고 가 가지고 농촌이 대단히 피해를 본 지역이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추수기를 맞이해 가지고 가을이면 천고마비다 그러는데 그 천고마비가 어디로 가 버리고 계속 구름이 끼고 비가 와요. 주기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부총리님, 혹시 수발아라고 얘기 들어 보셨어요, 수발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박준영 위원 아마 모르실지 모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대충 뜻은 짐작이 갑니다.

○박준영 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추수를, 이제는 또 기계로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 기계가 논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익었는데 놔두지요. 그러니까 거기 벼 상태에서 쌀이 싹이 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쌀은 식용으로 먹기에 대단히 부적합해 버리고,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아마 쌀의 한 3분의 1, 이렇게 발육이 덜 돼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총리님께서는 일자리 걱정을 하시고, 그런데 다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지금 농민들 수가 한 256만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16% 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1990년대만 해도 약 600만 명이었거든요. 그 절반이 됐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장관님께서 이런 책을 보셨는지 몰라요.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책은 못 봤습니다만……

○박준영 위원 이것 안 보셨으면 제가 오늘 이 책을 드릴 테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감사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박준영 위원 한번 보시고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관료들한테 한 권씩 사 드리십시오. 제가 사 드리면 좋겠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준영 위원 여기에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밀가루를 먹어서 걸리는 병 중에서 여성의 불임이 있습니다, 여성 불임. 그리고 염색체증후군이 있다 또 탈모의 원인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 100가지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인구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출생률도 낮고 이래서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게 되고 우리 재정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이걸 극복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가장 큰 건 256만밖에 안 남아 있는 농업인구 중에서 상당 부분이 농업을 또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3%입니다. 77%%, 세 끼 중의 두 끼는 지금 다 수입 쌀을 먹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시장은 대단히 불안하지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이 농수산업을 살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른 대안을 제가 나중에 제시하려고 그러지만 우선 지금 급하기 때문에…… 또 농업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나면 이제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태풍하고 비가 계속와 가지고 추수를 못 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농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적절하게 쓰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비비는 용도가 엄격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는다면 물론 당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준영 위원 그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재난의 경우는 엄격한…… 복구를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재난이고 뭐 이런……

○박준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재난이기는 한데 제가 농업재해보험을 보니까요, 수발아 이런 것은 또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정부 예산이 있고요 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 약 1조가 약간 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쨌든 식량도 안전한 식량을 공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저는 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한번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시간이 급합니다, 뭔가 대책을 빨리 발표해서 250만 우리 농민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아, 정부가 우리를 그래도 보살피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식량 문제도 해결하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농업 특히 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박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 많은 우려들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의 경제 전망도 다시 또 이렇게 나빠지면 성장치도 낮출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지금 현재 기업 구조조정, 영국의 브렉시트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또 중국 경제도 어렵게 보이고, 국내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현대자동차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당초 목표한 경제성장, 금년도 성장, 내년 성장률 달성에 큰 문제 없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는 일단 올해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내년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어떻게 보면 하방요인들인데 하방요인도 있지만 대외 여건 같은 데서 또 위로 올라가는 요인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일부에서는 2% 초반 성장으로 하락하고 고착화되는 거냐는 우려도 많기 때문에 제반 사항을 점검하셔서 당초 목표한 금년도 성장, 내년도 성장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경제 현안이라든지 민생경제가 어려움으로 가는 일은 없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개헌 논의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개헌 논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개헌 논의는 사실은 국회에서도 개헌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이 한 200여 명 가까이 계속 정부에 촉구를 해 왔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정부에서는 사실은 개헌으로 경제가 자칫하면 블랙홀에 빠져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 오히려 자제를 해 왔던 것 아

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권, 특히 국회의 그러한 강한 요구 또 우리 국민의 여론 이런 것을 정부가 수용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는 형태가 되니까 어찌 보면 더 화합이랄까 이런 차원을 통해서 오히려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도 보탬이 되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당연히 국가 정책은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의…… 그러나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필요하다 하는 과거에 그런 언명이 있으셨……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공론화가 되고 국회에서 다 또 이것을 절차를 밟고 그렇게 되면……

○이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어떤 불확실성을 하나 또 없애고 그런 것은 경제에 분명히 좋은 영향이 될 것입니다.

○이현재 위원 불확실성을 없애서 여하튼 정부에서도 오히려 이런 큰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현안이나 민생을 챙기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경제는 그렇게……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이고 경제에 관한 정책 이것은 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리고 지난 8월까지 세수가 20조 7000억인가요? 그리고 법인세만 해도 약 7조가 더 들어왔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금년도도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이고, 내년도도 법인세가 어느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나요? 실무적으로 누가 아시는 분이 답해 줘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추경 대비 2.6조 증가 그래서 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법인세수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현재 위원 대개 어느 정도나 전망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올해 추경 대비 2.6조 증가까지가 2017년 예산입니다.

○이현재 위원 내년에 법인세의 경우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법인세에서만.

○이현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경제에 빨간불 들어왔다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때는 증세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들을 하시는데 2조 6000억이 더 들어온다면 굳이 법인세를 올려서 경제를 다운시키면서까지 그런 무리한 법인세 인상은 추진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어쨌든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성장률 달성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어떻게든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그런 방향에는 역행하는 겁니다.

○이현재 위원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현재 위원 그리고 전국에 치안수요 때문에 파출소 신·증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하면 수요에 맞게 이런 데는 파출소라도 신설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부총리께서 검토를 해서 또 수요가 준 데는 줄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하남 위례지역의 파출소라든지 또 부산북부경찰서 교통과의 증축 문제 또 이천 장호원파출소 신축 문제 또 대구 달서 상인지구대 신규 증축 문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신축, 경기도 안산단원서 선부3파출소 신축, 가평 설악파출소 이전 신축, 양산경찰서·범어파출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각별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존경하는 부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는

데 이 연설문 내용 만들 때 부총리하고 상의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송영길 위원 전혀 안 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안 씁니다.

○송영길 위원 경제 관련 연설문은 누가 만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경제 분야 쪽은 경제수석 쪽에서……

○송영길 위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만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때 계속 지적됐습니다만 부총리, 그 이후로 대통령 아직 못 만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는 시간이…… 대통령께서 시간이 안 됐고 제가 이제……

○송영길 위원 만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려고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빨리 좀 만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국감 때 논의됐던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내용이 전혀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절박한 문제도 하나도 안 들어 있고, 474 경제혁신 프로그램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미 임기 3년을 하고 4년째 접어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은 없고 계속 그냥 '잘할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제시해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보는데, 474 경제혁신은 폐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4% 경제성장 안 되지요, 내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내년……

○송영길 위원 내년도 3%로 잡은 것 아닙니까, 경제성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474 경제성장 계획은 폐기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나 그것은 비전이었기 때문에……

○송영길 위원 비전이고 뭐고 그것은…… 비전이야 우리가 10%라도 경제성장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무슨 초등학생들 공부하듯이 계획이 아니라 현실 가능하고 경제주체한테 손에 잡히는 목표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4% 경제성장은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광온 간사,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4%에 저희가……

○송영길 위원 내년도 계획 끝나면 임기 다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예.

○송영길 위원 이번에 힐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누가 되든 간에 이번 미 대선 과정에서 새 정부는 강력한 통상압박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이제……

○송영길 위원 한미 FTA 재개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봐서는 한미 FTA를 재개정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지 않을까……

물론 누가 당선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만약에 하겠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대비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한미 FTA에 대해서요?

○송영길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것은 그쪽에서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당선되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저는 한미 FTA 특위를 그때 해 봤는데 지금 ISD 투자자 국가 제소 사안 가지고 지금 제소된 사안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ISD는 지

금……

○송영길 위원 ISD 조항 가지고 지금 제소된 것은 거의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나중에 그것 좀 보고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법주권 포기다' 난리를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당시 기억이 납니다.

○송영길 위원 제가 그때도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따르면 이것 자체가 기우일 수 있다 지적을 했는데 사실 투자자 국가 제소에 대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는지, 우리 측이나 미국 측이나,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두 번째는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선제타격론이 나옵니다. 선제타격론을 두 개로 분류하면 하나는 북이 핵을 공격할 임박한 시기에 일종의 정당방위로서 먼저 선제타격이냐, 아니면 핵 시설 자체에 대한 예방적 타격으로서 선제타격이냐, 후자의 선제타격은 유엔법상 훨씬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정당방위적 차원에서 선제타격론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기재부는 내년에 북한의 선제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그런 예상까지는……

○송영길 위원 그렇게 보지는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저희는 그런 예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그 자체가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송영길 위원 경제 정도가 아니라…… 저도 아이가 군대에 가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우리들의 생명 자체가 위험에 다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뭐 전시라는 것은……

○송영길 위원 그래서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막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만남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 만남을 우리 외교부나 이쪽에서는 애써 부인하고…… 제재 국면 하는데 이런 것도 투 트랙으로 저는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송 차관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송영길 위원 송 차관님이 지금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십니까? 기재부의 송 차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1차관이…… 최 차관입니다.

○송영길 위원 송 누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송언석 2차관이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송언석입니다. 지금 송인창 국제 차관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영길 위원 남북경협에 누가 나가 있어요, 경협 위원으로? 송언석 차관이 안 나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닙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1차관입니다. 제가 위원입니다.

○송영길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송영길 위원 계속 강조했듯이 개성공단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야당의 강력한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그것을 예결위 과정에서 저도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일단 내년에 남북관계가 혹시 풀리게 되면, 개성공단이 살아나려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개성공단 문제는 별도로 저와 상의를 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리고 한진해운 문제는 지금 계

속, 그것도 1차관님이 하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돌파구를 만들어 봅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저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미주노선, 지금 어떻게 매각이 됐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요, 지금 아직…… 법원에서 공고를 낸 상황이고요.

○송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상선이 매각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직은 매각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영길 위원 머스크나 코스코나 다시 MSC 외에 다른 데서 한 적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직 없습니다. 28일까지 받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UNCITRAL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인천 송도에 유치돼 있는 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송영길 위원 그것을 제가 시장 때 유치를 해 놨는데 지금 현 시장이 완전히 지원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홍콩이나 다른 데로 가 버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 좀 우리한테, 유치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것 우리가 안 도와주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UNCITRAL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국제기구를……

제 구상은 송도를 제2의 브뤼셀처럼 지금 우리가 GCF도 유치를 해 놨고 월드뱅크 사무소도 송도에 있고 그다음에 ESCAP도 송도에 있고 UNCITRAL도 있어서 한 10개가 넘는 유엔기구가 송도에 돼 있는데, 원래 제 생각은 AIIB 같은 경우도 AIIB를 우리가 좀 더 빨리 배팅을 해 가지고 본부를 유치를 해 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미 그것은 늦었고 AIIB 아태사무소라도 송도로 유치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30분 거리에 있는 송도가 제2의 월스트리트처럼 국제기구를 집적해 놓으면 북한의 도발도 막는 심리적 효과도 크고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달성시키는 의미가 크잖아요.

저는 특히 AIIB가 우리 인천에 와 있다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기구가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북한 도발을 저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지방정부에다 맡겨 놓고 있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위원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9월 2일 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긴 것들,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체를 한번 짚어본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金光琳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세입 쪽에서 보면 저것은…… 8월까지 들어온 실적을 보면 소득세·부가세·법인세 세 군데에서 19조 1000억 그리고 전체 합계로는 오른쪽 밑에 20조 80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金光琳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해 제출하실 때는 7월까지 실적이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게, 8월 실적이 나왔어요.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임환수 예.

○金光琳 위원 저게 8월인데 9월 것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를 들면 8월까지 작년보다 20조 8000억이 더 들어왔는데 9월의 속도는 작년 9월보다 줄어듭니까, 유지합니까, 조금이라도 늘어납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좀 늘어납니다.

○金光琳 위원 9월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한 1조 얼마 정도 늘어

날 것 같습니다.

○金光琳 위원 1조 얼마 늘어났는데, 그런데 세입예산을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9월, 10월, 11월, 12월은 1원 한 장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봐도 2015년도의 실적 217조 9000억보다는, 20조 8000억 보태면 238조 7000억이 됩니다. 이게 금년도 전망이 되는 겁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숫자로 보고 있는데 이 예산에다가,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보다 6조 원이 더 들어오고,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그다음에 238조 7000억에 내년도 예산 국세수입 증가율 4%를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내년도 예산도 적어도 6조 원 이상 지금보다 더 들어올 것 같아요, 편성해 놓은 예산보다. 이것은 그런데 사실 보수적이니까 이렇지 제대로 9월에 1조가 더 들어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7·8조 정도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 이 숫자 이것은 산수인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별도로 저렇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金光琳 위원 그러니까 8월에 더 들어오는 것만 더 들어오고 이 이후에는 더 들어오지 않아도 내년도 세입예산은 한 6조 원 더 걷히게 되어 있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쪽에 보면 9월 2일 날 제출한 이후에 우선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땅 밑에 어느 정도 지진 지도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태풍이 10월 6일 날 불어닥쳤고, 그다음에 9월 5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8월 25일에는 잠수함에서 SLBM 쏘아 올렸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금년에 쌀이 풍년이 들면서 산지 쌀값이 확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온 1조 원 가까운 직불금 예산보다는 적어도 5000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그 위에 또 덮쳐 가지고 확인 침몰시키고 이런 데 대한 대책, 청년실업률, 그다음에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발표하신 개헌 소요, 이런 것들이 보면 예년 수준의 몇천억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에 메꿔 넣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몇 조 단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은 국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환경·사정 변경에 의해서 총규모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예산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따져 보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결국 국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미 반영이 된 것도…… 직불금 같은 것은 증액이 되어 있는 것, 추가로 되어 있고요.

○金光琳 위원 그런데 그것 1조 원 못 되는 것 가지고는 지금 쌀값으로 보면 한 5000억 부족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방위력 증강도 1년 당기는 데 한 이삼천 억 든다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光琳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 삭감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해 가지고 재원을 염출하지만 그 범위를 훨씬 넘는 세출 증가 요인들이 즐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좀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을 하더라도 재정수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6·7조 원 더 들어올 것 있는데 세출을 한 1·2조 더 해도……

재정수지 적자가 40.4로 지금 편성되어 있나요,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金光琳 위원 41% 목표에서 40.4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40% 정도로 개선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국회는 상시 삭감이 아니고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사정 변경에 따라서 대규모로 증액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로서는 하여튼 증액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꼼꼼히 살펴보고 또 당연히 국회에서 또 이것을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임해 가지고 웬만하면 총규모 증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학자금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조달을 위한 장학재단 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요. 지금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기준소득이 연 1850만 원인데 그게 소득 하위 23%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이 72%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취업 학자금 대출의 상환대출자 중에서 기준소득 이상에 해당해서 상환대출을 하게 되는 청년이 1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상환받지도 못할 것 행정비용만 발생하고 괜히 청년들 신용불량자 만들고 이런 것보다, 외국의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장학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효율성이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돈 다 뿌렸는데 걷지도 못하고 행정비용 발생하고 신용불량자 만드는 것에 비해서 그 제도 설계를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세금이 좀 더 걷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747을 내걸고 7% 성장을 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에서 적자국채가 107조였습니다, 5년 합해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5년 합해서 165조입니다. 매년 평균 33조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올해 세입예산안이 정말 거의 늘어나지 않은 그런 세입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 사실 농업이 1차, 2차, 3차 모두 관련된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농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참여정부 때 농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을 해 갑니다, 그 이후로.

그런데 제가 선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비단 농업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생태보전 지원, 경관 지원,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국제조약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을 얘기하셨는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새로 바뀔 때마다 헌법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그냥 선택만 하고 결단만 하면 되는 일이지 굳이 정부가 다 달려들어서 이것을 연구하고 지금 이럴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언뜻 얘기하신 걸로 보였는데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개헌 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대통령제 같은 승자 독식구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헌법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국회에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행정부는 그야말로 민생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개헌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헌의 논의기구는 국회이고 또 다 그렇게 논의가 돼서 결정이 날 것이고요. 저희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물론 경제 부처 아니라도 민생에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까지와 같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방금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 보면 농업이 선진화된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복지국가고 선진국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차 산업 쪽으로 해 가지고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 전환시킨다면 일자리도 많이 늘고 농업도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농업 경쟁력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6차 산업의 경쟁력이 나오는 것이고, 아마 농업에 대해서는 이 6차 산업이라는 말을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에서 처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단순히 과거와 같이 흔히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렇게 곡식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제경쟁력도 갖추고 이렇게 되는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그래서 농업과 수산업 쪽에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과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실천적인 그런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6차 산업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좀 더 많은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쌀값 문제가 심각한데 쌀 재배면적을 앞으로 줄이도록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송영길 위원 쌀하고 쌀직불금제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쌀 이외 작물에도 직불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대체작물이나 고부가가치 작물로 유도를 해야지 만성적인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국적으로는 남북관계도 좀 풀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고향 같은 데 가 보니까 요즘에 고온다습하고, 요즘에 와서 쌀이 막 싹이 터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부총리님한테 GCF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녹색기후기금 그것 이제 담당 국장이 확실히 있다고 그랬지요? 차관님, GCF 담당?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송영길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CF를 우리가 유치해 놓고 우리가 대리 이사국도 뺏겨 버렸잖아요. 그것을 좀 다시 복원시키고, GCF가 갈수록 중요해질 텐데 우리가 독일 본이랑 경쟁해서 뺏기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름만 GCF 본부를 우리 인천 송도에 놔두고 실제 기금 운용이나 지정 이런 것들은 다 유럽으로 빼돌려 버리면 껍데기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후변화 문제는 갈수록 중요하고 기금이 모일 텐데 이것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되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엑심뱅크가 그것 지정받았습니까, 위탁기관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직도 못 받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송영길 위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하나도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하고 있지요?

꼭 좀 되도록 하세요, 그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송영길 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 산림녹화운동을 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산림녹화운동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거의 70년대 초의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쌀을 지원하면 군량미로 전용된다고 보수세력이 비판하지만 나무야 어떻게 되지 않지 않겠어요? 물론 또 나무 심어 놓으면 잘라 가지고 땔감으로 쓸 거다, 군용으로 쓸 거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시간이, 그러려면 나무 심어 놓고 최소한 한 이삼십 년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통일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것은 어찌됐건 나무를 지금 심어 놔야 한 30년 후에 효과가 올 텐데 다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의 자산인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고건 전 총리께서 이것을 적극 주장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랬던

것으로……

○송영길 위원 그때 MB 대통령이 '내일모레 망할 북한에 뭘 나무를 심느냐'고 이렇게 답변해서 고건 전 총리가 너무 실망해서 사회통합위원장을 즉각 사표 냈다 이런 뒷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북의 문제로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탄소배출권 여기 보고했잖아요, 기재부. 탄소배출권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탄소배출권이 거래가 될 거란 말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나 이런 거래소도 우리 송도 이런 데 유치하는 방안을 GCF가 있기 때문에 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 산림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우리 돈 안 들이고 GCF 사업으로 할 수 있고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북한 산림을 하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GCF와 탄소배출권과 북한 산림을 연계시키는 그러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뭐……

○송영길 위원 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일종의 도그마로 북한붕괴론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에 한 1년 있어 보니까 중국에서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서방학자들이 중국붕괴론을 이야기해요.

북한붕괴론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몇 년 안에 붕괴될 것 같아요, 북한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야말로 예측을 할 만한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분이,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 우리 기금……

○송영길 위원 당분간 그럴 개연성이 안 보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제가 그걸……

○송영길 위원 부총리는 몰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우리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그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북한붕괴론이라는 현실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믿음으로 이것을 전제하고 경제정책이나 국가 외교·안보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내일모레 북한이 망할 것이다, 이런 전제로 계속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정책이 현실적이지가 못한 거지요, 지속가능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고 경제나 안보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제가 GCF와 탄소배출권과 북한 산림녹화는 일종의 그린 데탕트의 의미가 있고, 국제적 기구가 결합돼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없이, 북한에 나무 심자는 것에 대해서 보수세력이 반대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거고, 북이 지금 다락밭 정책을 실패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김정은이 했던 말 들어 보면 '북한산을 보물산으로 만들겠다. 몇 억 그루를 심겠다, 10년 안에', 박정희 정권 때의 산림녹화정책과 같은 것을 지금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다락밭, 주체농법이라는 미명하에 다락밭을 만들었던 과오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나니까 농업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런 건데 나무를 심어 주면 여러 가지로 북한 농업의 홍수 피해도 방지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린 데탕트를 통해서 탄소배출권을 벌어들여서 남북 간의 화해와 국제사회의 결합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GCF를 할 때 GCF의 시범사업으로도 이런 것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겠

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년입니다.

국세청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지난 국감 때 제가 마일리지 부가세 환급 소송과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가세의 최종 납세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 환급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 정리됐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분담할지 문제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오늘은 그 정도 하시고요.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국감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재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우쳤다, 예를 하나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도 않았고 위원 명단도 관리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언론이 후속 취재를 했더니 국토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기재부처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루는 기구인데 현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간 위촉은 재위촉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직 재위촉은 아니고 지금 중입니다. 다시……

○김태년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직은……

그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국감에서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정지역 버블 조짐이 보이는 데'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강남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월 17일부터 정부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 말뜻은 가능한 모든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그 특정지구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변화가 완전히 추세로서 잡혔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검토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으셔서 일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강남권의 가격 폭등세 이것은 잠시 주춤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경제 총괄 부처인 기재부의 말이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금 기재부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것 같지 않다 또 현안이 발생한 후에도 각 부처를 총괄 조율하는 것 같지 않다, 지금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면 시장이 신뢰를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은 워낙 복잡한 거여서 어느 특정 부처 홀로 담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

습니까? 세제·금융·수급, 이게 다 총체적으로 망라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발언도 신중해야 되고, 금융위는 금융만 담당하고 국토부는 건설만 담당하고 이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기재부가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부동산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과 건설과 우리 지원책이라고 하는 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타워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자세한 것은 국감 때 했었으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편성해서 국회 보낼 때 국채 발행 금리 이자율 2.3%로 보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태년 위원 물론 이자율을 매해 보수적으로 해 오셨는데, 심지어는 5%씩 해 올 때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2.3%가 안 되지 않아요? 국고채 3년물이 1.2~1.4%, 국고채 10년물이 1.4~1.6% 정도 수준인데. 그리고 최근에 국고채 50년물도 발행을 했잖아요, 1조원 남짓? 이것도 1.574%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2.3%는 조금 과도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 국회예정처도 한 1.7% 정도, 이 정도 보고 있는 것 같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 하여튼 뭐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건 또 예결위에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감액이 필요하면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금 3.5지요? 3조 5000억 편성해서 보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3조 5000억.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예산에 비하면 6% 증가한 거고 국회 수정안 대비해서는 한 11% 증가한 거고 추경 포함하면 한 3.6% 정도 증가한 건데 이게 실집행액이 한 사오천 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집행액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2016년도는 이른바, 이게 참 뭐 합니다마는 재난 재해가 좀 그래도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비로서 좀……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전제로 해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중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 예비비 3조 원으로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3조 5000억으로 지금 제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국회에 룸을 좀 만들어 주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룸이라기보다는 예비비도 좀 늘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사실 예비비가 정말 그야말로 예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김태년 위원 물론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여지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실집행률이 한 사오천 억밖에 안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올해는 그것이 좀 재난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김태년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송영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조경태 다 끝났는데요.

서면질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더 하시겠습니까, 송 위원님?

○송영길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조경태 예, 그러면 송영길 위원님께서 2차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부총리님, 오늘 대통령께서 저출산의 심각성 문제를 강조하셨는데 저도 전폭 동의합니다. 심각한데, 제가 지방정부를 하다 보니까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실에서 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송영길 위원 우리가 0세 25만 원, 1세 15만 원, 2세부터 7세까지는 10만 원씩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위탁시설에 맡기는 것의 4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런데 저는 모든 학자들의 평가를 보더라도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단계에는 부모하고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침팬지도 마찬가지고 부모하고 따뜻한 스킨십을 해야 이 아이가 인격 형성에, 사회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인성이 올바로 큰다고 봅니다. 이때 스킨십에서 소외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인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국가가 건강하게 되려면 0세부터 2세는 엄마의 품에서 자라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데 현재 우리 구조는 가정양육수당이 실제 수당의 4분의 1에 불과하니까,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20만 원 주고 위탁에 맡기면 80만 원이 넘게 주니까 서로 맡기려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가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것을 하려면 가정양육수당을 좀 올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올려 줘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사실상 이 저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우리가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사실 가장 큰 게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노동·자본 중에 노동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본도 사실 노동 속에 체화되는 겁니다. 토지도 요즘에는 앞으로 가상현실부터 시작하면 생산의 3대 요소 중의 핵심은 노동입니다.

그러면 노동은 다 우리가 출산해서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우리 기재부가 단순히 그때 1년에 관리하는 예산 개념이 아니라 아이 출산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왔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양육수당을 실제로 위탁수당과의 차액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기본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또 어린이집 그쪽의 협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0세에서 2세는 되도록 가정에서 키워야 된다는 것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 좀 앞으로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에서 논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조경태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예산안을 쭉 이렇게 보는데 이게 세출이 아주 빡빡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꼭 필요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세입을 봐야 어디서 룸을 만들고 또 세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입 관련해서 정확한 산출 근거, 지금 자료를 아까 주셨다고는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 근거를 '이것저것 고려해서 이렇게 세입 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 놓고 자료 줬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이거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것 다 반영한 거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숫자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산출 근거를 잡았다라는 그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예결위에서 세입도 정확하게 산출하고 또 그래서 결정하고 그

래야 또 세출 조정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체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위원 부총리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정말 좀 그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또 다른 분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전남지사 할 때 융자에 붙은 이자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융자를 얻어 간 사람이, 누가 얻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남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전체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인가 봐라, 그게 얼마인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도비로 좀 보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답을 부총리께서 그냥 대충 하시는데 정말 신중하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흙수저건 금수저건 간에 공정한 기회를 갖는다 이런 취지로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송영길 위원님께서 금방 보육료 관련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안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나왔을 때 정부에서 하는 안을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총리실까지, 임채민 장관 말할 것 없고요. 그다음에 여야 정책위의장님들 다 찾아가서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결국은 보육원에 가는 어린이는 그 당시로 보면 칠십몇만 원을 주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는 그 당시에 이십몇 만 원, 한 30만 원 가까이를 줬을 겁니다.

제가 그때 이 부작용을 얘기를 쭉 거론했어요. 서로 보육원을 보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모는 못 보낸다. 두 번째, 이제 유아원이 많이 생기는데 유아원에 보내는 부모는 전부 다 공짜로 보내니까 분명히 유아원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부담은 똑같이 늘어날 것이다……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애들 가서 보세요. 침 흘리고 변 보고 하는데 그것 누가 소독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애, 유아원에 보내는 애는요, 거의 며칠 만에 한 번씩 병에 걸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부모가 직장을 못 가고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가더란 말이지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쓰는, 유아원에 제가 가봤는데요, 유아원 바닥에 쓰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호르몬이 넘쳐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위원님께서 정말 두 살 이때까지는 꼭 집에서 키워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한 가지 딱, 양당을 찾아가고 정부를 찾아갔을 때 '야, 이게 정말 이렇구나. 우리나라 로비가 이렇게 세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게 두 당에서 다 답이 전부 '유아원연합회에서의 압력 때문에 절대 그것 주장을 못 합니다' 그래요.

정부가 국민들 세금을 쓰는 재정을 하면서 유아원 하는 원장들 얘기를 듣고 정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전체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미래의 신체적인 건강과 공정한 기회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학자금 이자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또 보육원을 꼭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안 보내도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는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대출금리는 사실 쭉 인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유아원 관계는 아까 송영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대통령께서 오늘 개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장 조경태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만 8000불 시대에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많이 변해야 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변화의 중심에 서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및 제4항 2건의 동의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정병국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45호 제3회의장에서 법인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광림	김두관	김성식	김종민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박명재
박주현	박준영	송영길	심재철
엄용수	유승민	윤호중	이언주
이종구	이현재	이혜훈	정병국
조경태	최교일		

○청가 위원(1인)

박영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전문위원	조의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유일호
제1차관	최상목
제2차관	송언석
차관보	이찬우
국제경제관리관	송인창
재정관리관	조규홍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예산실장	박춘섭
세제실장	최영록
경제정책국장	이호승
미래경제전략국장	백용천
정책조정국장	차영환
국고국장	위성백
재정기획국장	문성유
공공정책국장	정기준
대외경제국장	김회정
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이정도
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정책기획관	이계문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송준상

국세청

청장	임환수
차장	김봉래
기획조정관	김희철
전산정보관리관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김현준
개인납세국장	김세환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자산과세국장	양병수
조사국장	한승희
소득지원국장	김한년

관세청

청장	천홍욱
차장	김종열
기획조정관	이찬기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김재일

통관지원국장	이	명	구
조사감시국장	김	광	호
정보협력국장	이	종	우
조달청			
청장	정	양	호
차장	지	순	구
기획조정관	이	국	형
전자조달국장	김	선	병
국제물자국장	백	승	보
구매사업국장	백	명	기
신기술서비스국장	변	희	석
통계청			
청장	유	경	준
차장	정	규	남
기획조정관	조	창	상
경제통계국장	김	광	섭
사회통계국장	최	연	옥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진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2016. 9. 20.

○의안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최도자・정인화・김중로・윤소하・주승용・윤영일・김종회・최경환(국)・김삼화・김해영・전혜숙・채이배 의원 발의)
9월 8일 회부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6. 9. 8. 강효상・김상훈・안상수・유민봉・박대출・이진복・배덕광・윤한홍・장석춘・윤재옥・임이자・김진태・신보라・김규환・최교일・김성원・조훈현・정유섭・민경욱・김현아・최운열 의원 발의)
9월 9일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배덕광・지상욱・조경태・박맹우・윤한홍・박완수・박성중・정태옥・박정・이종배・윤종필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주광덕・정성호・황주홍・김세연・박완수・윤상직・유재중・김성태・성일종・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2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추경호・주광덕・정운천・이은권・송석준・장석춘・윤상직・민경욱・곽대훈・이현재・이철규・이채익・최교일・엄용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추경호・주광덕・정운천・이은권・송석준・장석춘・윤상직・민경욱・곽대훈・이현재・이철규・이채익・최교일・엄용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김현미・진선미・김종민・민병두・김해영・민홍철・김관영・추혜선・윤소하・윤후덕・김종회・최경환(국)・위성곤・김정우・정성호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이명수・이현재・홍문표・임이자・윤종필・경대수・장석춘・정태옥・박찬우・지상욱・유기준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9. 12. 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노웅래・김민기・윤관석・조승래・오영훈・주승용・장정숙・전혜숙・박홍근・최명길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천정배・박주현・송기석・정인화・윤영일・조배숙・박준영・장정숙・채이배・김삼화・이상돈・김종회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박광온・김해영・권칠승・이찬열・문미옥・백혜련・신경민・서영교・추미애・김현미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12. 김현미・김관영・김정우・김종민・김종회・김해영・민병두・민홍철・박남춘・위성곤・윤후덕・정성호・진선미・최경환(국)・추혜선 의원 발의)
이상 9건 9월 13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6. 9. 19. 윤호중·윤관석·이찬열·김해영·박주민·이학영·최인호·신경민·권칠승·원혜영·김상희·남인순·김종민 의원 발의)
9월 20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배덕광·조경태·김재경·박완수·주호영·김학용·김현아·안상수·박대출·김순례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배덕광·조경태·김재경·박완수·주호영·김학용·김현아·안상수·박대출·김순례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1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윤호중·이학영·홍익표·최명길·이찬열·손혜원·전현희·김해영·박용진·고용진·김현권·이용득·정성호·김상희·금태섭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제윤경·민병두·위성곤·서영교·윤종오·황주홍·표창원·고용진·권칠승·우원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제윤경·서영교·민병두·위성곤·윤종오·황주홍·표창원·권칠승·고용진·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2일 회부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박광온·김두관·문미옥·김부겸·김정우·송영길·박영선·윤호중·김종민·김현미·김종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22. 김현미·윤후덕·임종성·유은혜·김정우·표창원·신창현·윤관석·어기구·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3일 회부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6. 9. 23. 민병두·박용진·서형수·박재호·황희·김정우·박홍근·박경미·안호영·전혜숙·위성곤·박주민·임종성·전해철·남인순·채이배 의원 발의)
9월 26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6. 9. 26. 박영선·이찬열·이춘석·도종환·유은혜·문미옥·윤관석·박범계·오영훈·박홍근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6. 9. 26. 박영선·이찬열·이춘석·도종환·유은혜·문미옥·윤관석·박범계·오영훈·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7일 회부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신경민·이훈·이찬열·변재일·김해영·인재근·윤관석·이동섭·박정·권칠승·박재호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이현재·이진복·김재경·김승희·이명수·김성찬·김성원·박명재·박인숙·임이자 의원 발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박광온·권칠승·김태년·김정우·이찬열·문미옥·백혜련·김해영·추미애·김현미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김성식·김광수·조배숙·채이배·신용현·김관영·박선숙·박지원·송기석·이동섭·장병완·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이용주·장정숙·주승용·이태규·김경진·안철수·권은희·정동영·박준영·박주현·천정배·오세정·김중로·손금주·윤영일·황주홍·김수민·정인화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김성식·신용현·김관영·박선숙·박지원·이상돈·송기석·이동섭·장병완·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이용주·채이배·장정숙·주승용·이태규·김경진·안철수·권은희·정동영·박준영·조배숙·박주현·천정배·오세정·김중로·손금주·윤영일·황주홍·김수민·김동철·정인화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김성식·신용현·김관영·박선숙·박지원·이상돈·송기석·이동섭·장병완·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이용주·채이배·장정숙·주승용·이태규·김경진·안철수·

권은희·정동영·박준영·조배숙·박주현·정인화·천정배·오세정·김중로·손금주·윤영일·황주홍·김수민·김동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박주현·김성식·신용현·김관영·박선숙·박지원·이상돈·송기석·이동섭·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이용주·채이배·장정숙·주승용·이태규·김경진·안철수·권은희·정동영·박준영·천정배·오세정·김중로·손금주·윤영일·황주홍·김수민·김동철·정인화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박준영·김성식·신용현·김관영·박선숙·박지원·이상돈·송기석·이동섭·장병완·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이용주·채이배·장정숙·주승용·이태규·김경진·안철수·권은희·정동영·조배숙·박주현·천정배·오세정·김중로·손금주·윤영일·황주홍·김수민·김동철·정인화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김성식·신용현·김관영·박선숙·박지원·이상돈·송기석·이동섭·장병완·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이용주·채이배·장정숙·주승용·이태규·김경진·권은희·정동영·박준영·조배숙·천정배·오세정·김중로·손금주·윤영일·황주홍·김수민·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9건 9월 2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8. 채이배·김광수·신용현·주승용·김성식·박주현·유성엽·천정배·손금주·오세정·김중로·김삼화·송기석·이용호·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8. 채이배·김광수·신용현·주승용·김성식·박주현·유성엽·천정배·손금주·오세정·김중로·김삼화·송기석·이용호·윤영일·최경환(국)·장정숙·이동섭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8. 채이배·김광수·신용현·주승용·박주현·유성엽·천정배·손금주·오세정·김중로·김삼화·송기석·이용호·윤영일·이동섭·장정숙·최경환(국)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6. 9. 28. 원혜영·이찬열·조승래·이언주·정갑윤·이주영·윤영일·윤후덕·김경협·문희상·이용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29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6. 9. 29. 채이배·김광수·신용현·김성식·박주현·천정배·손금주·오세정·김중로·김삼화·송기석·이용호·윤영일·주승용·장정숙·이동섭·이태규·유성엽·최경환(국) 의원 발의)

9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6. 9. 30. 김규환·김명연·최연혜·송기헌·염동열·김기선·이은재·김승희·신보라·조훈현·문진국·이철규 의원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9. 30. 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6. 9. 30. 조정식·이언주·이찬열·윤관석·정성호·김관영·함진규·윤상현·김석기·박명재·이현재·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4일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6. 9. 28. 추혜선·심상정·노회찬·이정미·윤소하·김종대·권미혁·김해영·박남춘·박주민·백혜련·위성곤·유은혜·임종성·조배숙·황주홍·서영교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4. 이상민·김진표·박영선·백재현·정갑윤·주승용·김철민·김관영·안규백·배덕광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6. 10. 5. 조경태·유기준·박준영·송희경·조배숙·정성호·황주홍·박완수·김재경·전희경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6. 10. 5. 오영훈·유은혜·조승래·도종환·전재수·안민석·손혜원·박경미·노웅래·신동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6일 회부됨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10. 7. 박광온·이학영·권칠승·박경미·박정·박홍근·전해철·윤후덕·유동수·김상희·이춘석·김부겸·박찬대·김진표·문미옥·정성호·김종민·김두관·박주민·김해영·박주현·홍의락·이찬열·민병두·신경민·김정우·설훈·제윤경·조승래·인재근·송옥주·원혜영·최명길·박재호·김영진·김현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6. 10. 7. 송희경·이현재·이은권·김상훈·문진국·박덕흠·김순례·이종배·성일종·장제원·홍철호·김성원·노웅래·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0일 회부됨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1. 유승민·김세연·정유섭·박경미·최도자·김영춘·박남춘·변재일·김병욱·정성호·정동영·김재경·강병원·김영우·이학재 의원 발의)

10월 12일 회부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2. 김영춘·김경협·서형수·소병훈·유동수·김영진·이원욱·김병관·김부겸·박재호·이찬열·우원식·전재수·김종회·어기구·문미옥·김해영·진선미·안민석·권칠승·윤종오·최인호·김종훈·원혜영·표창원·박홍근·이학영·박선숙·김상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2. 김태년·유은혜·김병욱·설훈·조승래·이찬열·안민석·박경미·박광온·김병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3일 회부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4. 심재철·추경호·박명재·하태경·이종구·이현재·조경태·정용기·최교일·김재경·김광림 의원 발의)

10월 1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7. 박주현·최도자·이용주·김삼화·김중로·박준영·김성식·장정숙·김종회·정인화·이동섭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7. 박주현·최도자·이용주·김삼화·김중로·박준영·김성식·장정숙·김종회·정인화·이동섭·오세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8. 김두관·최명길·김해영·박남춘·박광온·이찬열·전혜숙·고용진·박재호·장병완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8. 김종민·박광온·민병두·제윤경·김관영·김영주·김태년·안규백·도종환·최인호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8. 이언주·이훈·양승조·최운열·이춘석·백재현·김상희·문희상·김철민·송기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1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신상진·김상훈·김성태·김순례·박맹우·박찬우·이완영·이우현·정우택·주광덕·주호영·함진규 의원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김종민·조승래·황희·어기구·김병욱·신경민·박남춘·위성곤·서영교·권미혁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김종민·박정·신경민·박남춘·민병두·위성곤·서영교·김부겸·이언주·권미혁·노웅래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이찬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신경민·안규백·이춘석·박정·김종회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박광온·신경민·권칠승·김해영·문미옥·백혜련·김정우·이춘석·이찬열·

김현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박광온·신경민·권칠승·김해영·문미옥·백혜련·김정우·이춘석·이찬열·김현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박광온·신경민·권칠승·김해영·문미옥·백혜련·김정우·이춘석·이찬열·김현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김정우·박광온·백재현·문미옥·이훈·이찬열·조정식·홍영표·김현미·문희상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박주현·김관영·천정배·이동섭·김광수·김경진·이용호·김종회·최경환(국)·황주홍·주승용·정동영·장정숙·조배숙·이용주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박주현·김관영·천정배·김광수·김경진·윤호중·이용호·김종회·최경환(국)·송영길·황주홍·주승용·정동영·장정숙·이용주·유성엽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이언주·이춘석·이훈·윤관석·최도자·송기석·박준영·이원욱·백재현·박찬대·설훈·황희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이언주·송기석·박준영·이원욱·이춘석·백재현·최도자·설훈·황희·이훈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박광온·신경민·권칠승·김해영·문미옥·백혜련·김정우·이춘석·이찬열·김현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이언주·김상희·송기석·박준영·이원욱·이춘석·백재현·박찬대·최도자·설훈·황희 의원 발의)

이상 14건 10월 20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0. 박주현·천정배·최경환(국)·조배숙·김광수·유성엽·이용호·정동영·장정숙·이동섭·이용주·김관영·김종회·송영길·윤호중·김경진·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0. 민병두·정성호·박주민·채이배·김영춘·서형수·이찬열·박용진·제윤경·박광온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0. 박주현·김관영·천정배·이동섭·김광수·김경진·윤호중·이용호·김종회·최경환(국)·송영길·황주홍·주승용·정동영·장정숙·조배숙·이용주·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1일 회부됨